

[세미나]

2020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

- 일시: 2020년 11월 6일 (금) 오전 10시
- 장소: 서울혁신파크
- 주최: 자유기업원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방역의 경제학

발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토론: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 코로나와 기업경영 환경

발표: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토론: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

코로나 방역의 경제학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1.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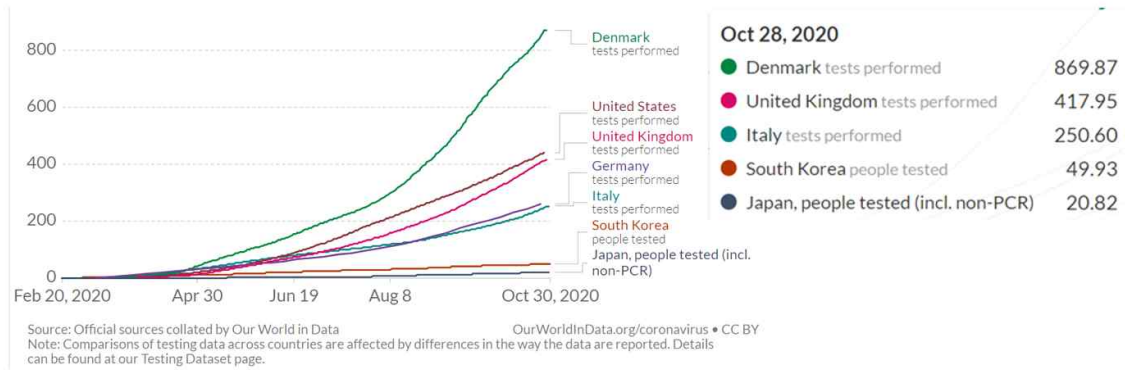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온 국민이 길에 다닐 때조차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 대면 접촉을 꺼리다 보니 경제는 위축되고 인간관계마저 소원해지는 듯하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습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지나친 두려움과 잘못된 방역정책에 있다고 본다. 기존의 다른 인플루엔자 독감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정은경 청장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3천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 숫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는 숫자인 듯하다.¹⁾ 코로나 사망자의 숫자는 11월 1일 현재 466명이다. 연말까지 가도 600명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독감이나 사스, 메르스 때는 지금처럼 학교와 교회 문을 닫게 하지도, 집회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K-방역으로 불리는 코로나 대응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를 피하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이글은 그러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2. 소위 K-방역에 대해서

신속하고 많은 검사는 K-방역의 핵심이었다. 2~4월 당시의 외신들을 보면 한국의 신속하고 안전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에 대한 놀람과 부러움을 표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그 이후 한국의 사례를 좇아 다른 나라들의 검사 건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10월 28일 현재 1,000명당 누적 검사건수는 49.93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무려 1,000명당 870명이 검사를 받았다.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라는 K-방역의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해졌다.

1) [팩트체크] "독감 사망자 연 3000명" 정은경 청장의 '거짓말'?, JTBC, 2020-10-26, <https://news.jtbc.joins.com/html/653/NB11975653.html>



자료: ourworldindata.com

그 밖의 방역 조치로는 추적과 격리, 락다운(Lockdown: 학교, 모임 등에 대한 제한),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이 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다양한 제한 조치들을 대응강도지수(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라는 하나의 지표로 통합해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10월 31일 현재 한국의 대응강도지수치는 55로서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서방 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 정도 되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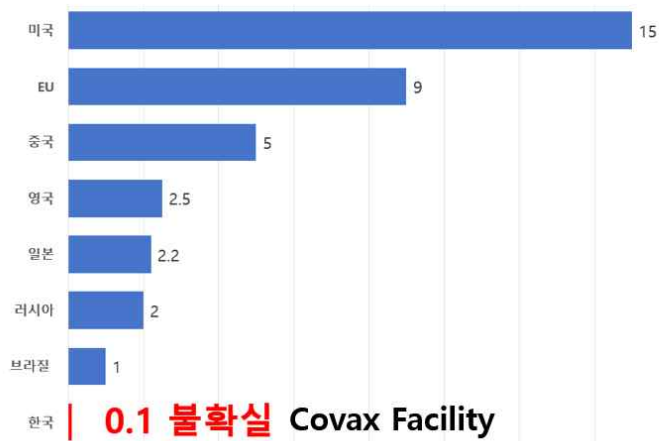
자료: ourworldindata.com

그러나 이 대응강도지수는 소위 K-방역의 매우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선별적 락다운(lockdown)이다. 8·15 집회, 개천절 야외집회에 대한 금지, 교회에서의 예배 금지 같은 조치들이 그렇다. 의학적 실험 및 관찰 결과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실내에서의 밀접접촉으로 이뤄진다. 야외에서, 그것도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는 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파의 가능성

을 보면 만원 지하철 탑승,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명이 둘러 앉아 먹고 노는 행위, 직장 내에서 마스크 벗고 회의 하는 행위 등이 전파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며 재난지원금 및 쿠폰 등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조장해온 측면마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락다운 정책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온 성격이 강하다. 외형은 코로나 방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검사와 모임 금지 등은 백신이 나오기 전의 임기응변식 조치들이다. 믿을 만한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접촉을 통해서 각자의 면역이 형성될 것이므로 검사나 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필요 없어진다. 따라서 좋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표가 보여 주듯이 선진국 정부들이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과 막대한 분량의 백신 선구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은 좋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이 없다. 그나마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면 코백스라는 곳을 통해 1천만 도스를 확보하겠다고며 가입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것이다. 코백스는 WHO 등이 주도하는 일종의 NGO여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능성부터 불확실하다. 계획상으로는 170여개국에게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 게다가 확보 가능성부터 언제 가능할지 알 수도 없다.

국가별 코로나 백신 선 확보물량(억 회분 d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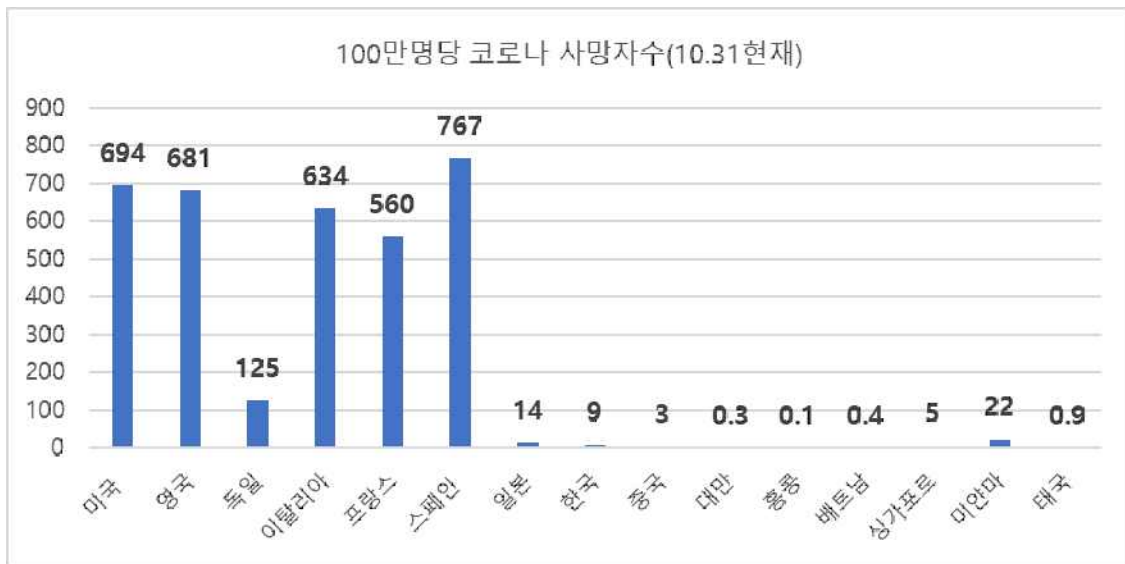
자료: <https://asia.nikkei.com/Business/Pharmaceuticals/US-China-and-other-rich-nations-chase-COVID-19-vaccine-paydays>

결론적으로 소위 K-방역은 연초에 찬사를 받던 검사의 신속성은 빛이 바랬다.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의 확보에도 매우 소극적 조치만을 취했다. 이제 K-방역의 실체는 야외에서까지 마스크의 의무화와 더불어 정치적 반대세력의 야외 집회 금지, 교회 및 학

교의 폐쇄 등만 남게 되었다.

3. K-방역 효과가 있는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

소위 K-방역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한국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코로나 피해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방역의 성공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서방 국가들보다 코로나 피해가 작은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모두 100만 명당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독일만 125명이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서방 국가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다. 특히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은 1명도 안 된다. 한국의 9명, 일본의 12명은 서방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크다. 앞의 대응강도지수에 나타나 있듯이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방역 강도는 서방국가들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로 대표되는 코로나 피해는 서방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아시아 국가들에는 방역이 아니라 공통적인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포옹을 덜 하는 등의 문화적인 차이, 유전자 변이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은 가설 단계여서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²⁾ 하지만 방역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2) 예를 들어 Naoki Yamamotoa,* and Georg Bauerb,c,*, Apparent difference in fatalities between Central Europe and East Asia due to SARS-COV-2 and COVID-19: Four hypotheses for possible explanation, Med Hypotheses. 2020 Nov; 144: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403102/>

일본과의 비교는 K-방역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더욱 크게 만든다. 단순한 사망자수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크다. 하지만 다음 섹션의 분석에 드러나 있듯이 연령별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실질적 사망률이 더 크다. 반면 대응강도지수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은 대표적으로 방역에 소극적인 나라이다. 방역도 별로 하지 않는 일본보다 상당히 강한 대응을 한 한국의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은 K-방역이 과연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든다.

4. 일본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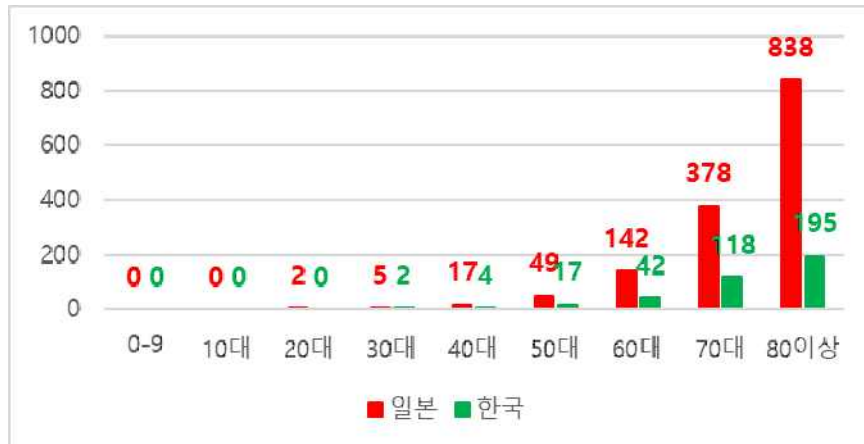
일본은 한국과 달리 코로나 방역에 소극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³⁾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일본의 코로나 피해는 한국보다 커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일본의 코로나 피해가 한국보다 작다면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코로나 사망자 상황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비교의 대상은 한국은 9월 20일, 일본은 9월 16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 상황이었다. 그 시기를 택한 이유는 분석 당시 9월 16일에 대해서만 연령대별 사망자수에 관한 일본 자료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월 20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383명, 일본은 1,500명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3.9배 더 많이 사망했다.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명, 한국 인구는 5,160만 명. 인구 면에서 일본이 2.5배 정도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본의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감안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진실이 드러난다.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80대 이상이 838명으로 58.6%, 70대가 378명으로 26.4%, 60대가 9.9%이다. 60세 이상을 합치면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한다. 사망자가 고령자에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도 비슷하다. 80세 이상이 195명으로 51.6%, 70대가 118명으로 31.2%, 60대가 11.1%.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9% 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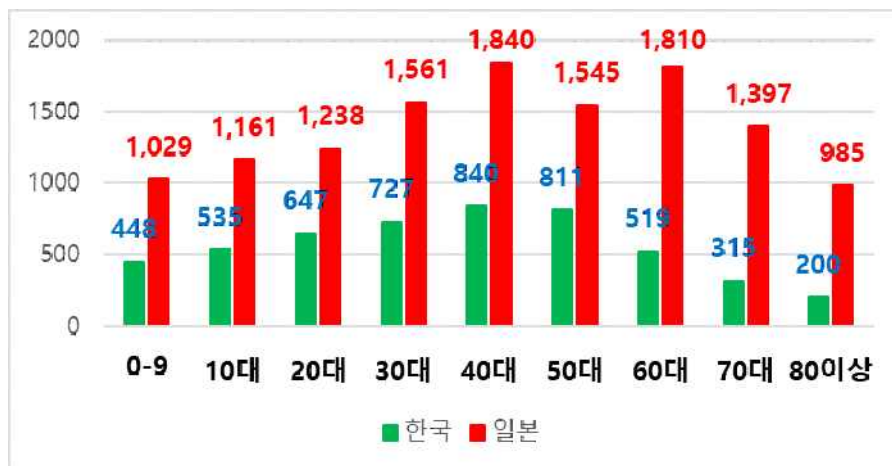
3) Coronavirus: Japan's mysteriously low virus death rate by Rupert Wingfield-Hayes, BBC News, Tokyo, 3 July.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188847>
우간다보다 못한 일본의 코로나 대응... 검사건수 G7 중 '꼴찌', MoneyS, 2020-06-2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62515138022348>

<그림> 한일 양국의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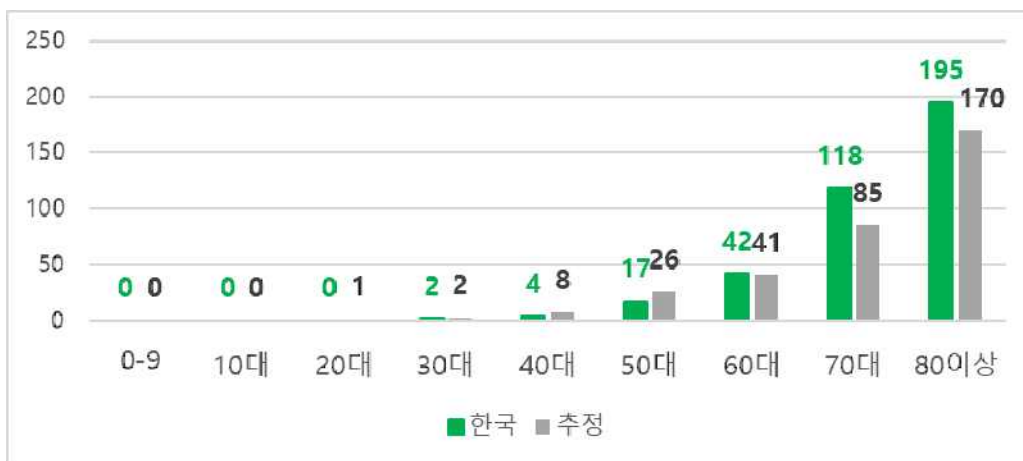
코로나 사망자의 이 같은 연령대별 분포는 고령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은 심각한 고령 사회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80세 이상 인구만 해도 한국은 200만 명인데 일본은 985만 명이다. 일본의 80세 이상 인구가 한국의 거의 5배에 달한다.

<그림> 한일 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이처럼 두 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진정한 피해를 알아보려면 전체 사망자수가 아니라 연령대별 사망자의 비율을 봐야 한다. 일본은 80세 이상 인구가 985만 명인데 그 중 사망자가 838명이어서 100만 명당 85.1명이다. 한국은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인데 사망자가 195명이어서 100만 명당 97.5명이다. 70대 사망자의 경우 일본은 100만 명당 27.1명, 한국은 37.5명으로 한국이 38% 더 많다. 50대 이하는 일본의 사망률이 더 높지만 어차피 그 나이 대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만약 한국인이 일본인과 같은 비율로 사망한다면 몇 명이 사망을 했을까? 일본의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률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 아래 그래프의 회색 막대이다. 80세 이상은 170명, 70대는 85명, 60대는 41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자의 숫자는 80세 이상 195, 70대는 118, 60대는 42이다. 60대 이상은 모두 일본보다 더 높다. 회색 막대를 다 합치면 333인데 실제의 한국 사망자 숫자는 378명이다. 한국이 14%가 더 많다. 한일 양국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를 감안할 경우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일본보다 14%나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한국보다 방역에 훨씬 소극적인 일본보다 한국의 사망 피해가 컸다는 사실은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을 품게 만든다.



5. 라파도 교수의 제안. 고위험 집단 중심의 방역

UCLA 대학 School of Medicine의 조셉 라다포(Joseph Lapado)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일련의 칼럼들⁴⁾을 통해서 기존 코로나 대책의 문제를 지적한 후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락다운은 코로나에 대한 옳은 대응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락다운은 바이러스 전파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 바이러스를 멸절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 그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청년들이 실업자로 내몰린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락다운처럼 문제를 피하지 말고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인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 방식의 락다운은 잘못됐다. 코로나 피해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나타날 뿐 40세 이하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다. 따라서 방역은 고위험 연

4)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칼럼. Joseph A. Ladapo, Masks Are a Distraction From the Pandemic Reality: Viruses inevitably spread, and authorities have oversold face coverings as a preventive measure. Oct. 28, 2020
<https://www.wsj.com/articles/masks-are-a-distraction-from-the-pandemic-reality-11603927026>

령층에 국한하고 젊은 연령층은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그 대신 요양시설 등의 고령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늘리고 치료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이 아니라 고령의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보호해야 한다.

전 인구 대상의 감시와 방역에 투입되던 자원을 고령층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거의 피해가 없는 계층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다. 예를 들어 학교라면 문을 열고 검사는 나이가 많은 교사들 대상으로 자주 검사를 해야 한다.

라파도 교수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고 제안한다. 마스크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실내 착용의 경우 실험 결과에 따르면 2% 정도의 감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2% 정도로 줄여줄 뿐이다.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도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 마스크로 인해 미소 등 표정을 주고 받지 못하다보니 사회적 유대의 고리가 끊어지거나 느슨해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중요한 부작용이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상이 UCLA 의대 교수인 닥터 조셉 라다포의 진단이자 처방이다. 그의 말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결론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몇가지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셉 라다포 교수의 제안대로 방역의 중심은 60세 이상 고위험층인 고령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대신 저위험층, 특히 50세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허용해야 한다. 교회나 학교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마스크가 도움 되는 것은 실내에서의 비말을 통한 감염이다. 그것조차도 2% 정도의 감소에 그친다. 야외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실험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야외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의 야외 집회라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

넷째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선진국들에 의한 선구매 계약 물량이

워낙 많아서 내년 초에 백신이 출시된다고 해도 한국에 공급될 백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방역의 경제학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1. 전반적인 평가

문재인 정권에서 행해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김정호 교수님의 지적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나 제기된 ‘개인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습관화’에 대해 공감한다. 이하에서는 김정호 교수가 제시한 ‘K-방역’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논거들을 보강해 보고자 한다.

2. 문제점에 대한 평가

김정호 교수는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K-방역’을 허상에 불과해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한국의 검사 건수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제시한다. 발제문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던 ‘2차 대유행’ 시기인 8월 16일 이후로도 한국의 검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며, 기꺼이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던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자 또한 김정호 교수와 마찬가지로 K-방역이 ‘정치방역’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제시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대응강도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강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방역의 정도가 강한 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방역의 강도는 강한데 정작 검사 건수는 낮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이질성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보여주기식 정치의 결과였지 방역 자체에 충실한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K-방역의 허상은 정부의 백신 확보 의지에서도 드러난다. 김정호 교수는 선진국들이 막대한 분량의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1천만 doses 확보를 위한 코백스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는 10월이 돼서야 코백스 퍼실리티에 선입금을 지불해 참여 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2천만 명분 백신은 개별기업(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 기업의 백신 개발 실패에 대한 가능

성을 염두해도, 분명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K-방역의 허상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더 잘 드러난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방역에 소극적인 나라였고 코로나 사망자는 1,500명으로 한국보다 3.9배 정도 더 크다. 이러한 사망자 수는 일본의 인구수가 한국보다 2.5배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해도, 한국보다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결과로 한국의 방역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층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김정호 교수의 지적처럼 코로나의 실제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 사망자수의 비교가 아닌, 연령대별 사망자수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한 ‘실질적 사망자’를 통해 김정호 교수는 한국의 사망자 숫자가 일본보다 14%나 더 많음을 지적한다. 토론자는 김정호 교수의 이러한 비교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젊은 층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사망자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방역을 위한 문제 인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김정호 교수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UCLA 대학의 조셉 라파도(Joseph Lapado)교수의 주장을 빌려온다. 그의 주장은 이하 다음과 같다. 방역의 대상이 전 연령층이 아닌 고령층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정호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과도한 야외 집회 금지 조치 지양,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토론자는 이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감백신 사망자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을 때, 정부의 ‘열린 자세’를 지적하고 싶다. 독감백신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인과성’이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 시기에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 비과학적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그 어떤 방역 정책도 성공적일 수 없다.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역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기업경영 환경

- 항공업계의 재편 전망과 기안기금 정책의 검토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1. 상황이 심각한 업종들: 서비스산업 ('HEART' 업종)
 2. 네 차례의 추경예산의 실효성
 3. 초토화되는 기간산업: 항공과 해운업계
 4. 정리
- <참고자료>

1. 상황이 심각한 업종들: 서비스산업 ('HEART' 업종)

▣ 경영환경 전반

- 전년 대비 4월과 9월에 각각 108만개, 83개 감소하였으며, 일자리 감소는 대부분 헬스케어, 미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됨(KDI 보고서, 10. 21).
- 올해 하반기 재계의 '5대 키워드'는 생존(Survival), 비용 절감(Cost Cutting), 구조조정(Out), 언택트(Untact), 조직 변화(Transform) (한국CXO연구소 보고서, 'SCOUT')
-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고위험군 기업들은 외부 금융지원이 없으면 존립에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려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
- 올 하반기에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더욱 두드러져 광고·마케팅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이 줄고, 인건비 부담으로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분위기도 확산되며, 비수익 사업부문에 대한 인력 등 구조조정이 예상됨. 특히 이동이 제한되면 서 항공·해운업, 여행업, 교육업, 숙박업 등의 구조조정과 도산이 늘어날 것임.

■ 반면에 '비대면(언택트)' 업종은 빠른 성장세를 보임. 게임, 포털 등 IT업계를 비롯해 화상서비스, 온라인 유통, 배송 등이 대표적인 비대면 업종이며, 온라인 거래 증가로 포장지, 바이오, 전지(배터리), 가공식품 위주의 식료품은 코로나19 특수로 전망이 밝음.

■ 코로나19로 건물 폐쇄, 재택근무 등을 경험한 기업들은 앞으로 유사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을 분산시키는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실제로 SKT는 모든 직원이 본사로 출근하는 대신 거주지 20분 거리 이내의 '거점 오피스'로 출근하는 방식을 도입함 (본사 → 공유오피스, O2O 비대면 사업의 강화)

▣ 위기의 대면(對面) 서비스 업종: 코로나 위기의 '심장(HEART)'

- 숙박업 & 호텔(Hotel)
- 공연·영화·예술 등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 항공사(Airline)
- 음식점(Restaurant)
- 여행사(Travel) 등.

■ 한국CXO연구소의 주요 대면 업체 50곳의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은 11조2135억원으로 지난해(19조2258억원)보다 41.7%(8조124억원) 감소. 지난해 상반기 6900억원의 영업이익 → 금년도 1조2200억원의 적자로 전환.



자료: 조선비즈(2020. 10. 13일자)

▣ 5대 업종의 피해 상황(2020. 10 현재 전년 대비 매출액)

- 여행업계(Travel)

하나투어(-73.9%), 모두투어(-71%), 롯데관광(-68.8%), 세종(-66.3%), 노란풍선(-55.9%)

- 여가·스포츠·오락 및 외식업(Recreation·Restaurant)
강원랜드(-63.5%), 파라다이스(-41.1%), 그랜드코리아레저(-40.5%), 외식업 대폭 감소.
- 공연·영화·예술 등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CJ CGV(-67.7%), 키위미디어그룹(-90.7%) 등.
- 숙박/호텔(Hotel)
호텔롯데(-44.6%), 호텔신라(-40.5%) 등.
- 항공사(Airlines)
 - ▷ 업계 전체의 운송실적은 전년 대비 97.6% 감소
 - ▷ 전체 시장에서 국내선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김포-제주, 김해노선에 집중)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형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으로 현금흐름 확보
 - ▷ ‘목적지 없는 항공여행’은 일시적 이상 현상(market anomaly).
- 항공, 호텔, 여행사 등이 포함된 ‘심장(HEART)’ 업종은 전자나 자동차 등 제조, 건설 부문 등에 비해 매출 비중은 낮지만, 시중의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요소.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소비할 기회가 차단되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음.”

2. 코로나19 추경예산

▣ 금년도 네 차례의 추경예산 규모(약 64조원)

- 3월 1차 추경예산(3월) 11조7천억원
→ 대구·경북 지원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 4월 2차 추경예산(4월) 12조2천억원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3차 추경(7월) 35조1천억원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및 (상품권 포함) 경기보강 패키지
- 4차 추경(9월) 7조8147억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 등 가계소득 지원.

- 내년도 556조원 편성(안) → 코로나 예산 반영

'20년 **코로나19 극복 추경**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32조원 수준

행정부 기초치 **20.5조원**, 추경 **11.7조원**
※ 중복소요 0.7조원 제외

추경 주요내용

규모

총 11.7조원

세출 확대 **10.9조원** + 세입 경쟁 **0.8조원**

중점투자방향

1) 방역체계 고도화 2)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3) 민생·고용안정 4)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1조원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천억원 <small>-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구급차 확충, 마스크 공급 확대 등</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조 4천억원 <small>- 감염병 환자치료 병원, 폐쇄 의료기관 등</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격리치료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용자 등 5천억원 <small>-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지원, 경영안정자금 용자지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smal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4.1조원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경영자금 지원 3조 1천억원 <small>- 저금리 자금공급, 특례보증, P-CBO확대 등</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경영부담 경감 5천 8백억원 <small>- 인건비 부담 경감, 자발적임대로 인화, 전기료 감면 등</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3천 7백억원 <small>- 피해점포 회복,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smal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 민생·고용안정 3.5조원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2조 9천억원 <small>-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 양육수당 대상 확대 등 - 긴급복지, 건강보험료 감면(하위 20%),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5천 5백억원 <small>-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smal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1.2조원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특별재난지역 복구 4천억원 <small>- 특별재난지역 내 원활한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지원</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고용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4천 7백억원 <small>-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및 특고·일용직 등 고용안정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small>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2천 9백억원 <small>-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small> </div>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7조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차질없는 후속 지원 <small>- 재난대책비, 피해점포 회복지원, 전기료·건보료 감면</small>	7천 5백억원
대구·경북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small>- 긴급 경영자금 용자,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small>	7천 2백억원
대구·경북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고용 안정 <small>-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역특화산업육성 등</small>	1천 9백억원

기획재정부

추경사업 수혜계층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1조원**

의료기관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3천 5백억원**
*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 목적예비비 1조원 보강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용자금 **4천억원**
- 입원치료 음압병실 **300개** 확충
-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

격리·확진자

-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월 최대 45.5만원 ~ 5인 이상 월 최대 145.8만원
- 사업주에 日 13만원 한도 내 유급휴가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4.1조원**

소상공인

-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 경영안정자금용자,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 지역신보 특례보증 총 **3.6조원** 공급
-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보조(4개월) ※ 10인 이상 사업장 : **월 4만원**
- CV 피해로 인한 휴·폐업 점포 약 20만 업체 재기비용 총 **0.3조원** 지원

중소기업

- 긴급경영자금 **0.6조원** 등 용자 **0.9조원** 확대
- 신·기보 특례보증 **1.9조원**, P-CBO **2.2조원** 확대

민생·고용안정 **3.5조원**

저소득층·취약계층

- 저소득층 **169만** 가구에 소비쿠폰 **월 22만원**(2인가구 최대지원액) 지급(4개월분)
-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소비쿠폰 **10만원** 지원(4개월분)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월 5.9만원 추가, 총 14만원) 지급
* 공익활동형 참여자 보수 (現) 월 27만원 → (改) 현금 18.9 + 상품권 14.0 = 32.9만원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2인가구 월 77만원, 최대 6개월)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20%) **건강보험료 50%** 감면(3개월)

아동양육 가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맞벌이 보육지원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확대 [+1.25만 가구(총 2만명), +365억원]

일반 국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 환급 (0.15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1.2조원**

피해지역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내 원활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자금지원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 지원
>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2천억원** 지원
* 대구·경북 700억원, 기타지역 1,300억원
- 지역특화사업 R&D 중소기업 50개사, 맞춤형 바꾸쳐 340개사 지원

지역상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 확대, 정부지원율 **4%→8%** 상향조정(4개월)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 지방재정 보강, 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총 3천억원 앞당겨 정산

3. 기간산업: 해운과 항공업계

▣ 해운업계: “양극화된 경영환경”

-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현대상선(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지원. 당시 현대상선에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과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등 총 20척을 투입하여 건조비용 3조1532억원 지원으로 흑자 전환하여 연이은 ‘만선’ 행진을 기록 중.

- 반면, 중소형 해운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100대 해운사의 27%가 부채비율 400% 넘는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돼 금융권 차입,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기안기금 지원이나 자산매각이 어려워 자금난이 심각해짐.

- 해양진흥공사 지원금의 63%(4조1280억원)가 HMM에 집중된 반면, 중소선사 81곳의 지원금 규모는 약 2조3760억원으로 평균지원액은 292억원에 불과함. 원양선사들은 올해 초 공급 감소에다 미국 경기회복으로 운임이 오른 반면, 근해선사들은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으로 경영난이 심화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형해운사에는 불황이 없으나 중소형 해운사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대형해운사가 주로 운항하는 한국-미국 노선은 선박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인 반면, 중소해운사들은 주로 운항하는 동아시아, 동남아 노선에서 부진을 면치 못함.

주요 시장이 동남아인 중소형 선사들은 운용 선박이 많고 외국 대형선사들이 중간 기항지로 들러 낮은 운임만 받고 화물을 싣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임.

▣ 항공업계 현황: 구조조정과 시장의 재편

-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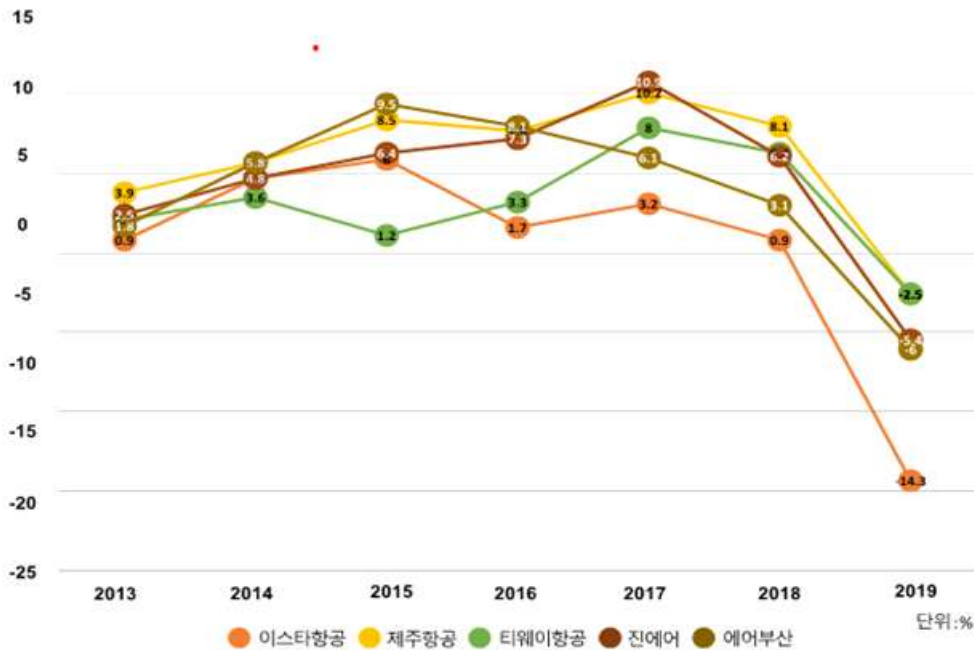
“전세계 181개국의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국제선 여객은 96% 급감하였고 국내선 여객은 60%까지 하락하여 국적사 여객기 374대 중 324대가 멈춰있는 상황…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월 평균 9천억 원의 고정비는 적자로 쌓이고,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5조3천여억원 규모로 항공사 및 임직원 모두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본·노동집약 산업으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상조업, 관광업 등 직·간접 고용 인원 84만 여명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입니다…” (항공협회 호소문 中)

- 각국 정부는 항공산업에 대해 대규모 금융지원 중. 미국은 상반기에 총 580억 달

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지원, 독일은 국적기(루프트한자)에 대한 무제한적 금융지원, 프랑스는 450억 유로(약 60.5조원)의 금융지원, 싱가포르 133억 달러(16.4조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하여, 중국·일본·대만·독일·영국·호주·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가 긴급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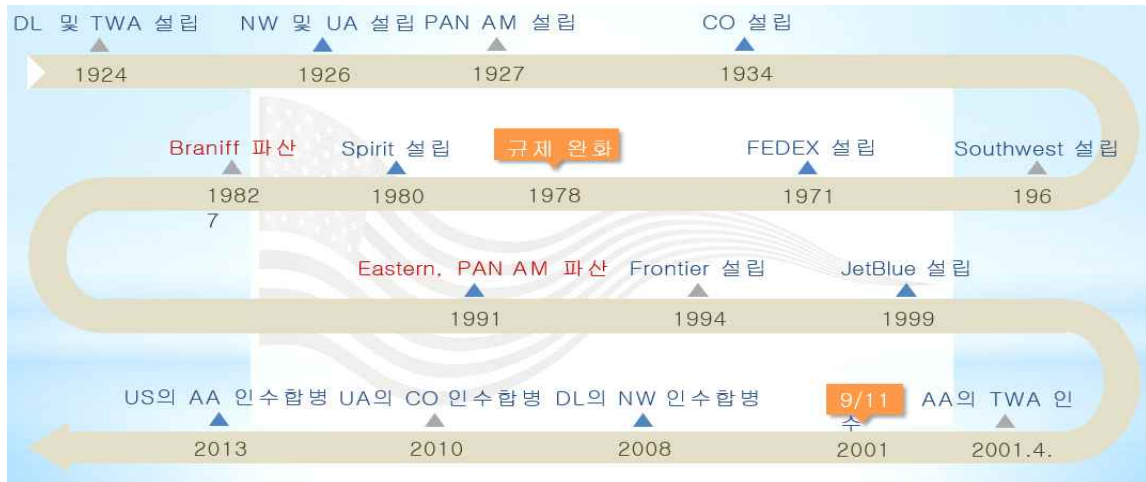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매년 6%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던 업계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한일 외교갈등으로 항공업계의 경영환경은 2018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작년에 이미 모든 항공사가 심각한 적자로 전환되었음.

〈그림〉 LCC의 영업이익률 추이



- 업황 악화로 인한 M&A, 코로나19 이후 운임의 상승, 여행수요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시장의 재편이 진행되어 과점시장의 형성이 예상됨.

<그림> 2000년대 미국의 시장재편 과정



- 금년 상반기 국제선 매출 감소 규모: 약 6조5천억원

매출 피해 예상(국적사) (단위: 천 명, 천 원)

'19년 국제선 평균 여객	(당초) '20년 국제선 월평균 여객 전망(a)	(수정) '20년 국제선 월평균 (2~6월) 여객 전망(b)		'20년 2~6월 여객 감소치 (a-b=c)	
		2월	3월	2월	3월
5,040	5,358 (↑6.3%)	2,686 (↓46.7%)	403 (↓92.0%)	2,671	4,955
5,040	5,358 (↑6.3%)	105 (↓97.9%)	95 (↓98.1,%)	5,252	5,262
5,040	5,358 (↑6.3%)	95 (↓98.1,%)	120 (↓97.6%)	5,262	5,237
5,040	5,358 (↑6.3%)	120 (↓97.6%)		5,237	
국제선 평균 운임(d)		매출 손해 추정			
279		2월	747,959,275		
		3월	1,387,252,792		
		4월	1,470,516,183		
		5월	1,473,338,670		
		6월	1,466,282,451		
		계	6,545,349,373		

참조:

1) 여객 전망 : 국적사 국제선 전체 여객성장률 적용

- (당초 전망) '19년 전체 6.3%
- (수정 전망) 전년 대비 '20년 2월 -46.7%, 3월 -92.0%, 4월 -97.9%, 5월 -98.1%, 6월 -97.6%
- 2) 여객 감소치 : 23,380천명
- (2월) 2,671,713, (3월) 4,955,271, (4월) 5,252,688, (5월) 5,262,770, (6월) 5,237,565
- 3) 국제선 운임 : '19년 K사 국제선 평균 운임 대비 LCC 감안 85% 수준 책정

■ 수요회복 전망

-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 시 까지 2~5년 소요 예상(ACI, 보잉 등)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년 국제항공 이용객 약 75% 감소 전망

■ 포스트코로나19 항공여객 행동조사(IIAC)

- 코로나 회복 후에도 감염우려에 따라 응답자 31.8% 1년 이내 해외여행 미계획
- 코로나 회복 후 여행 시기는 “백신 개발 이후” 응답자의 50% 이상
 - 감염에 대한 불안요소 제거 후 해외여행 예정 多.
- 즉, 해외여행 불안 심리로 예상 대비 수요회복 효과 미비 가능성 多.

■ 하반기 국제선 매출 감소 추정: 약 8조8천억원

(단위: 천 명, 천 원)

'19년 국제선 평균 여객		(당초) '20년 국제선 월평균 여객 전망(a)	(수정) '20년 국제선 월평균(7~12월) 여객 전망(b)		'20년 7~12월 여객 감소치 (a-b=c)	
연간	5,040	5,358 (↑6.3%)	7~12월 평균	120 (↓97.6%)	7~12월 평균	5,237
국제선 평균 운임(d)			매출 손해 추정			
279			7월 (C × D)	1,466,282,451		
			8월 (C × D)	1,466,282,451		
			9월 (C × D)	1,466,282,451		
			10월 (C × D)	1,466,282,451		
			11월 (C × D)	1,466,282,451		
			12월 (C × D)	1,466,282,451		
			계	8,797,694,706		

■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은 작년부터 시작됨.

- ▷ 아시아나항공 공개 매각 → 12월 HDC현산과 SPC 체결(2019. 12) → 백지화(2020. 9) → 채권단 관리체계 결정(기안기금 2조4천억원 지원)

- ▷ 이스타항공 → 제주항공과 MOU(2019. 12) → SPC 체결(2020. 3) → 백지화(2020. 7) → 강제해고로 직원 1,680명 중 1/3만 남음(사실상 청산 단계)
- ▷ 플라이강원 → 매각 협상 중

- 기안기금(기간산업 안정화 목적) 40조원 조성(2020. 5)의 실효성에 의문
 - 적용금리(7%+α)
 - 코로나19와 무관한 경영악화로 재무적 부실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에 지원
 -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이 신청 대상이나 현재까지 미루고 있음.

■ 항공업계 인력 운용 현황(2020. 9. 30 현재)

	인력조정 인원	9월 4주차	9월 2주차
1. 대한항공	9,598명 (현원대비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9,018명 ○ 무급휴직: 502명 ○ 임금삭감: 78명(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9,099명 ○ 무급휴직: 495명 ○ 임금삭감: 78명(임원)
2. 아시아나	8,205명 (현원대비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2,578명(~8월) *통상임금 70%에 합의한 직원 ○ 무급휴직(15일): 5,588명 ○ 임금삭감: 39명(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2,668명(~8월) *통상임금 70%에 합의한 직원 ○ 무급휴직(15일): 5,583명 ○ 임금삭감: 39명(임원)
3. 제주항공	2,235명 (현원대비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2,011명 ○ 단축근무: 206명 ○ 임금삭감: 18명(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1,953명 ○ 단축근무: 256명 ○ 임금삭감: 18명(임원)
4. 진에어	873명 (현원대비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807명 ○ 무급휴직: 59명 ○ 임금삭감: 7명(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892명 ○ 무급휴직: 57명 ○ 임금삭감: 7명(임원)
5. 에어부산	936명 (현원대비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846명 ○ 무급휴직: 42명 ○ 임금삭감: 48명(임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857명 ○ 무급휴직: 40명 ○ 임금삭감: 48명(임원급)
6. 이스타항공 (휴업)	1,427명 (현원대비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업: 1,4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업: 1,427명
7. 티웨이항공	1,266명 (현원대비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984명 ○ 무급휴직: 22명 ○ 단축근무 등: 2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964명 ○ 무급휴직: 22명 ○ 단축근무 등: 249명
8. 에어서울	394명 (현원대비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382명 ○ 무급휴직: 9명 ○ 임금삭감: 3명(임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382명 ○ 무급휴직: 8명 ○ 임금삭감: 3명(임원급)
9. 에어인천	-		
10. 플라이강원	142명 (현원대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 14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직 : 142명
계	25,076명 (현원대비 65%)		

4. 정리

■ 지원정책의 실효성 검토

■ ‘HEART’ 업계 지원 성과

“한국관광공사, 업계의 폐·휴업률조차 파악 못 하는데...문체부는 400억 쿠폰 편성”

“소비 할인쿠폰 지원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의 반발”

"정부 해운업계 지원금 HMM만 몰아줬다"... 지원 못받는 중소 해운사 줄도산 위기

“기안기금 40조원은 왜 안 팔리는가?” etc.

■ 코로나19의 충격은 누가 흡수하는가? 가계소득 지원보다 기업 부문에 집중해야.

■ 지원정책의 편중: 중소기업 vs. 대기업 → 한시적/보편적 지원으로 M&A 환경 조성이 필요.

■ 정책 방향

■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 ‘선택과 집중’

■ 기안기금의 대상과 방법 → 한계기업들의 ‘골든 타임’

■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안 등의 폐기.

■ 항공업계 → M&A를 통해 시장규모가 유사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산업구조로 전환.

■ 아시아나항공 → 경영정상화 계획 및 재매각 로드맵 필요.

<참고>

Airlines	Country	지원 내역
Delta	USA	- 54억 달러 지원 - 지원금 38억 달러, 10년채 16억달러 - 10년물은 초기 5년은 1%, 이후 5년 기준금리+2%
AirFrance-KLM	France	- 40억 유로 - 3년 (2년 연장 옵션) - 1년차 0.75%, 2년 1.5%, 3년 2.75%
AirFrance-KLM	Netherlands	- 24억 유로 한도대(5년) 및 10억유로 론(5.5년) - 한도대 1.35% (보증수수료 별도), 론 6.25% (2/3년 6.75%, 4/5년 7.75%)
Cathay Pacific	HongKong	- 78억 홍콩 달러 브릿지 론 - 18개월 만기 - 홍콩리보 + 1.5%
Tourism Industry	New Zealand	- 5년 론 - 첫 2년 무이자, 3년차 3%
Aeroflot	Russia	- 700억 루블 보증(5년), 670억루블 론 (1년) - 론 금리 2%
Aviation, Ground handling	Nigeria	- 21년 부터 5%금리 론 제공 예정

코로나19와 기업경영 환경

- 항공업계의 재편 전망과 기안기금 정책의 검토 -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

- 일부 IT 업종, 택배 배송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특히 운수업, 숙박업, 여행업은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음
- 이미 항공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저가 항공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며 코로나 사태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함
-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 혹은 코로나 종식 이후 항공업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 될지 여부이며, 실제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항공수요가 회복되려면 2~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충격으로 항공업계를 비롯한 서비스 부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 국내 항공업계는 2020년 들어 대형항공사와 중소항공사 포함 2만5천여 명을 감원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구책을 시도 중이나 당분간 위기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이하 기안기금)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항공업계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금 적용금리가 7% 이상으로 현재 금리 기조 하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이며, 적용 대상 항공업체를 놓고 주의가 요망됨
-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항공업계의 구조 재편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항공업은 공항 및 물류 네트워크 등 고용유발 효과가 여전히 큰 업종으로 지원책이 불가피함
-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객 중심에서 화물 중심으로 항공업의 다각화 전략이 요망되며, 이 기회를 통해 국내 항공시장 수요에 적정한 경쟁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 현재 상황 하에서 정부는 항공업계의 건전한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빠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시해야 함
- 이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시기를 놓고 실효성과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기업 경영의 경우 더욱 더 적절한 지원시기와 지원규모가 중요함
-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인 공정경제 3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항공업계 구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 요구됨